

금융포용의 문제점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경제정책1실

2021. 4

금융포용의 문제점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경제정책1실

2021. 4

발행인 : 지상욱

지은이 :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1실

발행일 : 2021년 4월 7일

발행처 : (재)여의도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인 쇄 : 디엔시파크

발 간 사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충격이 서민·중산층에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밖으로 가장 먼저 밀려나고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성도 크게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경제금융구조의 안정성 훼손, 지속성장 약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시 서민·중산층에게 “알맞은 비용으로 적시에 금융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우리나라 금융 포용수준은 비교적 높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서민금융상품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융상황 개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금융시장 양극화로 인한 금리단층으로 중간 신용등급의 소비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서민·중산층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금리 대출 등 구조적 금융소외 요소를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도 오름세입니다. 대출금리의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정책금융 공급확대, 금리인하 유도,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 등 다양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소중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되어 서민들의 금융소외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심을 다해 자문을 해주신 외부 전문가 그룹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창배 연구위원을 비롯한 경제정책1실의 연구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여의도연구원장 지상욱

CONTENTS

발간사

요약 / 1

I. 금융포용의 개념과 주요내용 / 3

1. 금융포용의 개념 / 5
2. 금융포용의 문제점 / 7

II. 서민금융의 공급 부족과 불완전성 / 9

1.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부족 /11
2. 고금리 대출 만연과 중금리 대출 부족 / 12

III. 금융포용 제고 및 서민금융 활성화 방향 / 17

1. 금융포용 제고방향/ 19
2.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와 정책금융공급 확대 / 20
3. 서민금융전담은행 설립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확대 / 25
4. 채무조정제도의 혁신방안/ 29

참고문헌 / 33

요 약

□ 금융포용의 개념과 문제점

- (개념) “금융포용은 취약그룹과 저소득그룹 등이 필요할 때 알맞은 (affordable)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의 접근과 시의적절(timely)하고 적절한 (adequate) 신용을 보장하는 과정.” (Rangarajan Committee (2008))
- (문제점) 접근성 측면에서의 포용수준은 높지만 취약계층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금리 대출 등 금융소외의 구조적인 측면은 심각
 - 특히 금융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금리구조 단절화가 초래되고 중신용등급의 금융소비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서민금융의 공급 부족과 불안전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부족이 더욱 심각
 - 저신용자(7~10등급) 대출금액 비중은 16%(2010) ⇒ 5%(2019), 중신용자(4~6등급)는 41%에서 20%로 큰 폭 감소
- 서민금융기관들 조차 지나치게 높은 고신용자 비중
 - 단위조합(55%), 신협(47%), 새마을금고(58%) 등 상호금융기관들의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 제기
- 고금리 대출 만연으로 인한 금융약자의 금융압박과 고통은 심각
 - 대부업의 법정금리는 인하했으나 평균 대출금리는 여전히 24%
 - 불법대부업 이용자수는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
- 신용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 부과로 인한 중금리 대출 부족

-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대부분 서민금융기관들은 중신용자에 대해 각각 15.3%, 19.4%, 20.9%, 27.6% 의 고금리를 부과

□ 금융포용 제고 및 서민금융 활성화 방향

- (정부재정지원 확대) 1천억원~2천억원 규모의 재정출연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기능 강화
 - 국회에 개정중인 서민금융법이 통과하더라도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출연 대상을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여서 서민공급 확대에는 불충분
- (서민금융전담은행 설립) 70조원이 넘는 우체국 예금중 최소 40조원 (19.12, 중저신용자 개인대출잔액의 10% 수준)을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금융공급을 하여 서민금융공급 문제를 해소
 - 3~7등급의 중·저신용 등급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대출금리는 4~14%
- 채무조정제도의 혁신방안
 - (공적채무조정 신청전(前) 사적채무상담 의무화) 사적채무상담(또는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사적채무조정 대상 확대 및 이자율 인하)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연체 잠재연체자까지 확대하고 적용 이자율도 대폭 인하
 - (소액장기 연체채무 원금 탕감) 100만원이하 5년 이상의 연체채무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고 채무상환 가능성도 거의 없음

I. 금융포용의 개념과 주요내용

1. 금융포용의 개념 / 5

2. 금융포용의 문제점 / 7

1. 금융포용의 개념

□ Rangarajan Committee (2008)의 정의가 가장 적절한 개념

- “금융포용은 취약그룹과 저소득그룹 등이 필요할 때 알맞은(affordable)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의 접근과 시의적절(timely)하고 적절한(adequate) 신용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 그리고 이는 아래의 다섯 단계 조건의 충족을 시사함
 - ① 가장 기초적인 물리적 접근성: 도소농 지역의 금융회사의 지점 설치, ATM기 설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초적인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함.
 - ② 단순한 지리적 접근 외에 거래의 편의성과 거래비용의 축소 등이 확보 ⇒ 지리적, 비용적 요소 외에 비가격적 비용이나 규제로 인해 금융소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 ③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즉,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정보의 부족과 비대칭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함.
 - ④ 금융포용의 세계는 금융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 예) 취약계층의 신용등급에 비해 높은 고금리 대출, 대부업체 대출 등
 - ⑤ 금융포용의 마지막 단계는 적기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보이지 않는 규제와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변화(특히 금융약자와 관련된 금융정책이나 제도변화) 등에 의한 장애요인

〈표 1〉 금융소외 및 금융포용의 정의 예

저자	정의
ADB(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포용은 예금, 대출, 자금결제, 이체,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빈곤 및 저소득 가구와 영세기업에 공급하는 것
Stephen P. Sinclair(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외는 적절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함
Chant Link and Associates, Australia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외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렴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의 접근이 특성소비자들에게 부족한 상태를 의미함
Treasury Committee, House of Commons, UK(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포용은 개인이 적절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의 접근 가능성을 의미함
Scottish Government(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포용은 적절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의 접근을 의미함. 이는 동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 지식, 이해 등을 포함함. 반면 금융소외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
United Nations(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포용은 금융부문이 금융이 제공 가능한 (bankable) 모든 사람 및 회사에 대해 신용 접근을 제공하고 보험 제공 가능한 모든 사람 및 회사에게 보험 접근을 제공하며 모두에게 저축 및 자금결제에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포용적 금융은 자격이 되는 모두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자격이 되는 모두가 원할 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ial Inclusion in India(Chairman: C. Rangarajan)(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포용은 금융서비스에의 접근과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신용을 필요로 할 때 알맞은 (affordable) 비용으로 시의적절하고 알맞은 신용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과정을 의미함
World Bank(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서비스에의 폭넓은 접근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가격 및 비가격 장벽이 없는 것을 의미함

출처 : 노형식·이순호 (2014) 재인용

2. 금융포용의 문제점

□ 금융의 접근성 측면에서의 국내 금융포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금융포용지수(Global Financial Inclusion Index: Global Findex)에서도 확인됨
 - 2017년 우리나라의 계좌보유 및 저축 보유비율은 각각 세계 22위, 18위이며 대출 비중은 28위

□ 다만 국내 금융포용의 취약은 네번째 조건, 취약계층의 신용등급보다 높게 부과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고금리 대출의 만연에 있음

- 금융소외의 구조적인 측면, 고금리에 의한 장애요인, 담보대출관행 등 가격적, 제도적 금융장애요인들이 심각한 수준
- 특히 금융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금리구조 단절화가 초래되고 중신용등급의 금융소비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신용대출 평균 금리(17.11)는 은행(5.1%)과 저축은행(25.4%), 캐피탈(21.6%) 간 큰 차이

〈표 2〉 Global Findex 구성 요소

금융포용 범주	변수
계좌	제도권 금융기관(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 계좌 보유 성인(15세 이상) 비율
저축	제도권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저축한 적이 있는 성인 비율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성인 비율 주택금융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성인 비율
자금이체	지난 12개월 동안 임금이나 정부 지위금 수취를 위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의 계좌를 활용한 적이 있는 성인 비율 지난 12개월 동안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송금 및 자금 수취 거래를 위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의 계좌를 활용한 적이 있는 성인 비율
보험	성인 중 민영 건강보험 보유 비율 농림수산업 종사 성인 중 농작물보험이나 자연재해보험 보유 비율

자료 : World Bank(박창균, 허석균 재인용, 2016)

〈표 3〉 Global Findex 2011~2017

	Account (% age 15+)			Savedatafinancialinsti tution(%age15+)			Borrowedfromafinancialin stitution(%age15+)		
	2011	2014	2017	2011	2014	2017	2011	2014	2017
Australia	99%	99%	100%	62%	61%	62%	17%	23%	20%
Austria	97%	97%	98%	52%	60%	56%	8%	13%	14%
Belgium	96%	98%	99%	43%	56%	56%	11%	16%	16%
Canada	96%	99%	100%	53%	63%	68%	20%	27%	26%
Chile	42%	63%	74%	12%	15%	21%	8%	16%	13%
Colombia	30%	39%	46%	9%	12%	9%	12%	16%	14%
Czech Rep.	81%	82%	81%	35%	38%	45%	9%	13%	15%
Denmark	100%	100%	100%	57%	65%	63%	19%	22%	21%
Estonia	97%	98%	98%	29%	32%	47%	8%	14%	14%
Finland	100%	100%	100%	56%	57%	55%	24%	22%	20%
France	97%	97%	94%	50%	52%	48%	19%	15%	18%
Germany	98%	99%	99%	56%	58%	55%	13%	19%	20%
Greece	78%	88%	85%	20%	13%	13%	8%	10%	2%
Hungary	73%	72%	75%	17%	19%	24%	9%	9%	7%
Italy	71%	87%	94%	15%	34%	45%	5%	13%	16%
Israel	90%	90%	93%	25%	53%	53%	17%	41%	35%
Ireland	94%	95%	95%	51%	49%	48%	16%	18%	17%
Japan	96%	97%	98%	51%	60%	64%	6%	8%	6%
Korea, Rep.	93%	94%	95%	47%	53%	55%	17%	18%	18%
Latvia	90%	90%	93%	13%	25%	28%	7%	17%	10%
Lithuania	74%	78%	83%	20%	28%	34%	6%	10%	13%
Luxembourg	95%	96%	99%	52%	60%	62%	17%	18%	21%
Mexico	27%	39%	37%	7%	14%	10%	8%	10%	6%
New Zealand	99%	100%	99%	60%	71%	69%	27%	33%	29%
Netherlands	99%	99%	100%	58%	59%	59%	13%	13%	12%
Norway		100%	100%		78%	79%		29%	35%
Poland	70%	78%	87%	18%	21%	33%	10%	19%	23%
Portugal	81%	87%	92%	26%	25%	32%	8%	9%	9%
Slovak Rep.	80%	77%	84%	37%	44%	50%	11%	18%	20%
Slovenia	97%	97%	98%	29%	33%	31%	13%	13%	16%
Spain	93%	98%	94%	35%	48%	51%	11%	18%	18%
Sweden	99%	100%	100%	64%	75%	75%	23%	28%	21%
Switzerland		98%	98%		55%	60%		8%	10%
Turkey	58%	57%	69%	4%	9%	23%	5%	20%	14%
U.K.	97%	99%	96%	44%	52%	64%	12%	21%	18%
U.S.A	88%	94%	93%	50%	54%	62%	20%	23%	29%
World	51%	62%	69%	22%	27%	27%	9%	11%	11%
OECD	85%	88%	90%	37%	45%	47%	13%	18%	17%

자료 : World Bank, Global Findex Database 2017

주: OECD평균은 아이슬란드(Iceland)를 제외한 36개국 평균 수치임

Ⅱ. 서민금융의 공급 부족과 불완전성

1.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부족 /11
2. 고금리 대출 만연과 중금리 대출 부족 /12

1.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부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부족이 더욱 심각

- 저신용자(7~10등급) 대출금액 비중은 16%(2010) ⇒ 5%(2019), 중신용자(4~6등급)는 41%에서 20%로 큰 폭 감소

〈표 4〉 금융권의 신용등급별 대출금액 및 비중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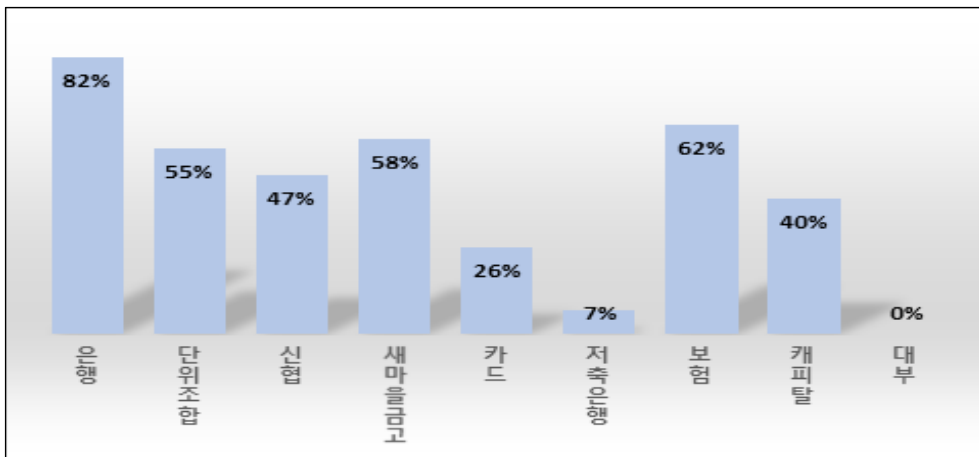
	대출금액(조원)				구성비(%)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	총계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	총계
2010.12월	393.4	379.0	143.0	915.4	0.43	0.41	0.16	1.00
2019.12월	1217.9	323.6	83.4	1624.9	0.75	0.20	0.05	1.00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서민금융기관들 조차 지나치게 높은 고신용자 비중

- 단위조합(55%), 신협(47%), 새마을금고(58%) 등 상호금융기관들의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 제기

〈그림 1〉 2019년 각 금융기관별 고신용자(1~3등급) 분포(%)



출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2. 고금리 대출 만연과 중금리 대출 부족

(1)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 대부업체 사용자와 평균대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사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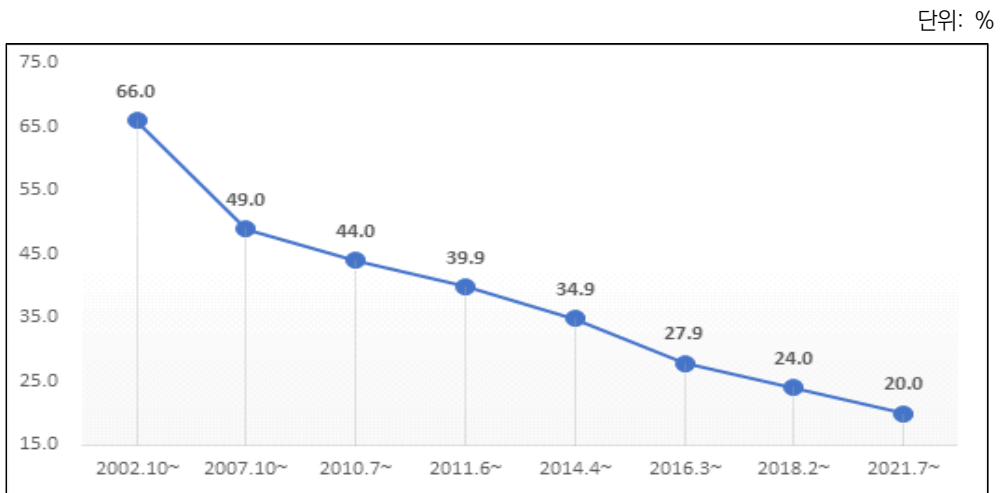
〈표 5〉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2009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부잔액(조원)	5.92	8.72	10.01	11.16	13.25	14.64	16.5	17.3	15.9
이용자수(만명)	167.5	252.2	248.6	249.3	267.9	250.0	247.3	221.3	177.7
1인당평균부채(만원)	353	346	403	448	495	586	667	784	896

자료: 금융위원회

- 대부업체의 서민금융의 법정금리는 순차적으로 인하되고 있지만, 평균대출금리(신용)가 24%에 달해 여전히 금융약자의 금융압박과 고통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림 2〉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



자료: 금융위원회

〈표 6〉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 추이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신용대출(%)	0.412	0.415	0.373	0.354	0.346	0.321	0.299	0.25	0.24
담보대출(%)	0.195	0.186	0.178	0.178	0.172	0.173	0.171	0.16	0.151

자료: 금융위원회

- 불법 대부업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금융포용은 더욱 비판적
 - 2015년의 불법대부업체의 사용자수는 33만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43만명으로 무려 10만명이나 증가
 - 이용총액도 2015년의 10.6조원에서 2016년 24.1조원으로 2배 이상, 1인당 부채규모도 3,209만원에서 5,608만원으로 무려 75%나 증가
 -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이자율도 110.8%에 달해 고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표 7〉 불법 사금융 이용 현황

	2015년	2016년
이용자수	33 만명	43 만명
이용총액	105,897 억원	241,144 억원
1 인당 이용총액	3,209 만원	5,608 만원
연이자율	1.1458	1.1088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2) 저축은행의 고금리 관행

- 2018년 5월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10.2조원이며, 20% 이상 금리를 쓰고 있는 차주수는 85.1만명으로 78.1% 차지
 - 대출잔액 기준에 의한 비중 역시 6.7조여원으로 66.1%를 차지
- 이들의 평균대출금액은 8백만원으로 평균대출금리는 25.6%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임

〈표 8〉 저축은행 금리구간별 대출현황

구 분	차주수 (만명)	비중 (%)	대출잔액 (억원)	비중 (%)	1인당 대출액 (백만원)	평균금리 (%)
10%미만	3.0	2.8	3,063	3.0	10.2	7.7
10%이상~15%미만	4.7	4.3	7,281	7.1	15.5	12.9
15%이상~20%미만	16.2	14.9	24,336	23.8	15.0	18.3
20%이상	85.1	78.1	67,723	66.1	8.0	25.6
합 계	109.1	100.0	102,403	100.0	9.4	22.4

자료: 금융감독원 (2018.7)

- 이러한 고금리 실태는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5등급 이상의 중신용자부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 부과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음
- 4등급의 경우에도 19.4%, 5등급(20.9%), 6등급(23.4%), 7등급(25.3%), 8등급~10등급(25.2%) 등 신용등급의 신용위험과 별 큰 차이 없이 고금리를 관행적으로 부과한 결과로 해석됨

〈표 9〉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신용등급별 평균금리 (잔액기준)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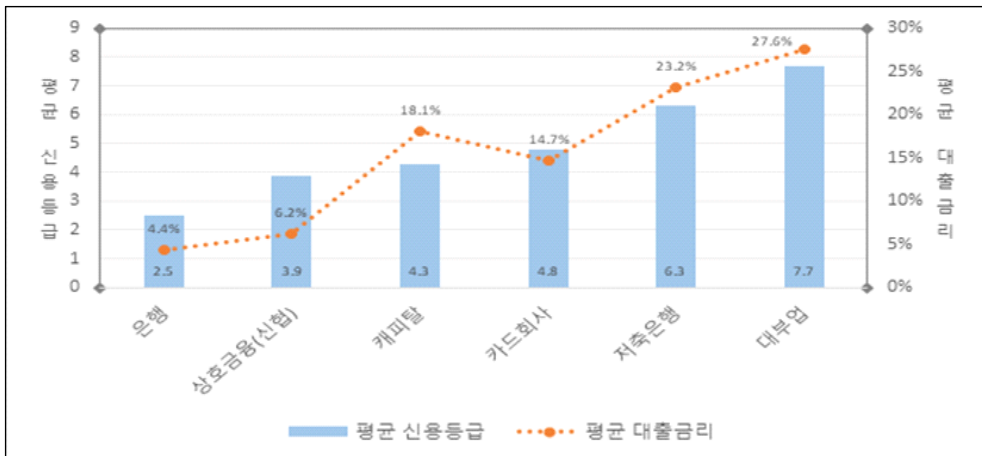
구 분		16.12 말		17.12 말 (A)		18.5 말 (B)		증감 (B-A)	
		평균 금리	비중	평균 금리	비중	평균 금리	비중	평균 금리	비중
고신용	1~3 등급	17.3	8.9	16.4	8.7	16.6	8.0	0.2	△0.7
중신용	4 등급	21.4	8.1	19.8	8.2	19.4	8.2	0.4 ↓	0.0
	5 등급	23.1	18.7	21.7	20.9	20.9	22.7	0.8 ↓	1.8
	6 등급	25.9	34.3	24.6	35.6	23.4	36.8	1.1 ↓	1.2
	소계	24.5	61.1	23.0	64.6	22.1	67.7	1.0 ↓	3.1
저신용	7 등급	27.6	19.5	26.4	17.7	25.3	16.8	1.1 ↓	△0.9
	8~10 등급	27.6	6.9	26.4	7.2	25.2	6.6	1.2 ↓	△0.6
합 계		24.6	100.0	23.2	100.0	22.4	100.0	0.8 ↓	-

자료: 금융감독원

(3) 신용등급과 대출금리와의 괴리: 중금리 대출 부족

- 캐피탈사와 카드회사는 평균신용등급이 4.3과 4.8로 비교적 높은 신용등급이나 평균 대출금리는 18.1%와 14.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평균신용등급(6.3)에 비해 평균대출금리는 23.3%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반면, 은행의 평균 신용등급은 2.5이며,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4.4%인데 비해 상호금융(신협)은 평균 3.9등급에 6.2%의 평균 대출금리로 나타나 큰 문제는 없어 보임

〈그림 3〉 각 금융권별 평균신용등급과 평균신용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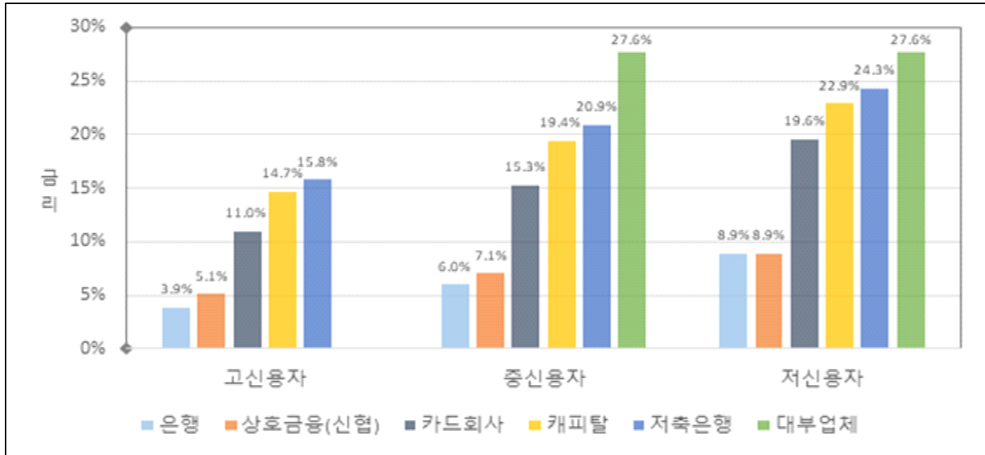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NICE평가정보, 업권별 협회, 대부업 실태조사 한국은행(2017.12) 재인용

- 평균신용등급과 평균신용대출간의 괴리는 중신용자에 대해 신용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한 결과임
 - 이는 중신용자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금리시장은 존재하지 않은 모순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중금리 대출이 사라지는 금리단층의 부작용을 초래
 -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대부분 서민금융기관들은

중신용자에 대해 각각 15.3%, 19.4%, 20.9%, 27.6% 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금리단층 현상을 초래

〈그림 4〉 각 금융권역별 신용대출 금리



주: 1) 2017년 9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단, 상호금융 및 대부업체는 2017년 3/4분기중) 2) 금융기관별 신용대출 금리의 단순평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권별 협회, 한국은행 재인용(2017.12)

Ⅲ. 금융포용 제고 및 서민금융 활성화 방향

1. 금융포용 제고방향/ 19
2.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와 정책금융공급 확대 / 20
3. 서민금융전담은행 설립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확대 / 25
4. 채무조정제도의 혁신방안/ 29

1. 금융포용 제고방향

□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을 위한 좀 더 종합적이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

- 정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장기침체와 금융의 양극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대부업체 사용이 증가
 - 정부정책에 의한 개선효과보다 경기 양극화와 금융 양극화에 의한 저신용자의 금융 악화 속도가 큼
- 제대로 된 금융포용이 실현된다면 대부업체의 사용금액(잔액)이 대폭 감소하고, 중금리 대출이 확대 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날 것임

□ 금융포용확대를 위한 5대 정책방향

-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 서민금융전담은행의 설립을 통한 중금리대출의 대폭 확대
- 고금리 잠재연체자에 대한 사전 채무상담·조정 시행 및 금리 대폭 인하
- 공적 채무조정 신청 전(前) 사적 채무조정 및 상담 의무화
- 소액장기연체자의 채무 면제 확대

2.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와 정책금융공급 확대

(1) 서민정책금융 개요 및 실적

□ 국내 정책금융기관 구조

- 산업정책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정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 금융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원), 그리고 서민정책 금융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담당

〈표 10〉 정책금융기관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구분	기관명	설립년도	설립목적	주요업무
대내	산업은행	195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개발·육성 산업자금의 공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중소기업 육성 및 기반시설 확충 지역 및 에너지·자원 개발 기업·산업 해외진출 및 기업구조조정
	기업은행	19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 신용제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자금대출·어음할인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 채무 증서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197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 진흥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197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보증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보험, 창업기업지원 신용정보종합관리
	기술보증기금	19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신용보증 및 평가 일반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지역신용보증기금	19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00)를 중심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서민금융진흥원	20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 금융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햇살론(2010), 미소금융(2009) 새희망홀씨(2010), 바꿔드림론(200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
대외	수출입은행	197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해외투자·자원개발 금융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해외투자 지원 정부기금 수탁(EDCF, 남북기금)
	무역보험공사	19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및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거래 위험 담보 해외투자거래 위험 담보

□ 서민정책금융의 현황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소금융(2008년~), 햇살론(2010년~), 바뀐드림론(2008년~), 새희망홀씨(2010년~)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자들의 금융부족과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표 11〉 정책 서민금융상품 개요

구 분	재 원	자금용도	공급 채널	지원요건	
				당초	현행
미소금융 (08년~)	휴면예금 기부금	창업 운영 자금	미소법인, 민간 등	차상위계층 또는 7등급 이하, 금리 4.5%	차상위계층 6등급 이하, 금리 4.5%
햇살론 (10년~)	복권기금 ,금융회사 출연금	생계 자금	상호금융, 저축은행 (진흥원 보증)	6등급 이하 (4천만원 이 하) 또는 2,600만원 이 하, 금리 햇살 13% 이 내, 바뀐 21% 이내	6등급 이하 (4,500 만 원 이하) 또는 3,500 만 원 이하, 금리 10.5%이 내
바뀐드림론 (08년~)	행복기금 수익금	대환 자금	은행 (진흥원 보증)		
새희망홀씨 (10년~)	은행 자체 수익	생계 자금	은행	5등급 이하 (4천만원 이 하) 또는 3천만원 이하, 금리 19% 이내	

자료:금융위원회

○ 서민정책금융의 공급 실적

- 2013년(4.76조여원), 2014년(4.42조원), 2015년(4.68조원), 2016년(5.04조원), 2017년(6.8조원), 2018(7.2조여원), 2019(8조여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새희망홀씨는 순수한 정책금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서민정책금융의 공급규모는 크지 않음.
⇒ 2019년의 경우 4.2조여원에 불과

〈표 12〉 정책 서민금융 공급실적 ('20.6월말 기준)

(단위: 억원)

대출상품 (출시)	공급실적					대출잔액
	'16	'17	'18	'19	'20.6	
미소금융 ¹⁾ ('08.7~)	4,207	4,573	4,022	3,564	1,929	7,872
햇살론 ²⁾ ('10.7~)	22,129	33,463	30,007	34,115	15,821	55,956
바꿔드림론('08.12~)	1,343	763	1,174	976	-	1,597
햇살론17('19.9~)	-	-	-	3,807	4,923	7,488
햇살론youth('20.1~)	-	-	-	-	576	503
새희망홀씨('10.11~)	22,720	29,991	36,612	37,563	-	-

1) 민간사업수행기관 및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모두 포함한 실적, 잔액은 '20.5월말 기준

2) 근로자햇살론 및 사업자햇살론 포함

3)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대출로 은행 '16.7월, 저축은행 '16.9월, 상호금융 '17.6월 출시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2) 서민정책금융의 기능강화

□ 정책금융기능의 비교¹⁾

- 국내 4대정책금융의 분야별 비효율성은 “중소기업정책금융>대내외산업정책금융 > 소상공인정책금융 >서민정책금융” 으로 분석되었음
- 서민정책금융은 산재해있던 정책금융기능의 통합(서민금융진흥원)으로 경합적, 중복적 지원의 가능성이 낮고,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하여 최적수준에 이르지 못한 실정
 - 따라서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나 지나치게 고금리를 쓰는 저소득, 저신용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

1) 김영철외, (2020)

□ 서민정책금융 기능강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확대 시급

- 정부가 지속적으로 서민정책금융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향후 정책금융의 공급을 지금보다 확대가 중요
- 서민정책금융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타 정책금융의 재원구조처럼 정부의 직접 출연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
 - 특히 산업정책적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타정책금융의 재원으로 정부의 직접적 재정 출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정책금융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의 출연에 그치고 있어 서민 금융지원에 한계
 - 현재 4대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행복기금 수익금 등은 대부분 한시적 재원이어서 안정적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정부재정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 강화가 핵심

- 서민정책금융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취약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하는 것이 중요
 - 현재 4대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행복기금 수익금 등은 대부분 한시적 재원이어서 안정적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현재 국회에 개정중인 서민금융법이 통과하더라도 불충분
 - 서민금융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출연 대상을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
- 매년 정부 재정에서 1천억원~2천억원 규모의 직접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

〈표 13〉 서민정책금융 자원 현황

상 품 ('17 년 공급실적)		재 원	현 황
미 소 금 용	기업·은행재단 (2,739 억원)	기업·은행 기부금	• 기부 5,650 억원 / 계획 1 조원 ※ 은행은 기부금 납입 완료 (2,650 억원)
	지역법인 (1,186 억원)	일반 기부금	• 사실상 종료 (개인 기부금만 소액 유입)
	민간사업수행기관 (647 억원)	휴면예금 이자수익	• 大判 및 어카운트인포 등의 영향으로 휴면예금 출연규모 감소
	소액보험 (60 억원)	휴면보험금 이자수익	• 정상 출연 중
햇 살 론	근로자햇살론 (29,800 억원)	복권기금, 금융회사 출연금	• 복권기금 ('16 ~ '20 년, 8,750억원) 출연 종료 도래 • 금융회사 출연금 (한도 9,000 억원) 한시적
	사업자햇살론 (3,664 억원)	복권기금, 지자체, 금융회사 출연금	• 1차 사업의 잔여재원으로 운영 중
바꿔드림론 (763 억원) ※ 안전망대출도 동일 자원 활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회수금	• 일회성으로 연체채권을 매입 (추가 매입 없 음)하여 자금유입이 한정적
새희망홀씨 (29,991 억원)		은행 자체 자원	•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 협의

자료: 금융위원회

3. 서민금융전담은행 설립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확대

(1) 사잇돌 대출의 기능과 한계

□ 사잇돌 대출의 확대

-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정책성 중금리 상품임
 -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협약을 맺어 위험부담을 공유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중금리대 신용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해서 출시되었음

〈표 14〉 사잇돌 대출 특성

	은행 사잇돌	저축은행 사잇돌 II
연소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2,000 만원 이상 • 사업·연금소득 1,200 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1,500 만원 이상
보증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5.2% 1)
금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8%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15%내외

주 : 1)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따라 연 3.6% ~ 8.6% 수준

〈표 15〉 사잇돌 대출 지원실적(20.6월말 기준)

(단위: 억원)

대출상품 (출시)	공급실적				
	'16	'17	'18	'19	'20.6
사잇돌대출	3,729	9,566	18,341	17,798	7,703

- 사잇돌 대출이 2018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어 역할의 한계를 나타냄
 - 사잇돌 대출의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나 정책금융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규모를 고려할 때 금리단절 현상은 서민금융전담은행의 신설 또는 우체국금융의 대출허용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임
 - ※ 중·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07조여원 수준('19.12,NICE)

(2) 서민금융전담은행의 설립과 역할

- 서민금융전담은행의 설립의 방법으로는 ① 신설하는 경우와 ② 우체국금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설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후자를 중심으로 검토

□ 우체국금융의 대출 허용과 장기적으로 40조원 공급

-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는 획기적인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체국금융의 대출허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40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 우체국금융은 예금은 취급하고 있으나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으로서의 자금공급의 역할은 근원적으로 불가능
 - 한국의 우체국 금융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신예금은 타금융기관에 예금, 공공투자, 채권투자형태의 자산 운용으로만 가능
 - 반면 OECD 국가중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국가는 17개국에 이르러 서민금융의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11개국은 자체 여신상품 판매, 6개국은 타 금융기관 대출상품 판매대행

〈표 16〉 OECD 국가 중 대출업무 취급 국가 현황

구분	대출업무 취급 (17 개국)		대출업무
	자체상품 (11)	업무수탁 (6)	미취급 (9 개국)
정부	• 터키		• 한국
공사	•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 체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일본	•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민영	• 포르투갈	• 독일	• 영국, 오스트리아

* 취급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우선 미취급으로 분류

○ 70조원이 넘는 우체국 예금중 최소한 40조여원(19.12, 중저신용자 개인대출잔액의 10% 수준) 정도를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금융공급을 한다면 서민금융시장의 부족한 서민금융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금융약자의 금융압박을 완화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서민금융전담은행의 역할

○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우체국 금융의 강점

- 우체국의 점포수가 많고, 읍면지역의 점포비율이 가장 높아 일반 은행 및 타상호금융기관보다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의 서비스에 유리 ⇒ 우체국금융의 대출을 허용하여 부족한 중금리 대출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 2016년 기준 읍면 점포비율: 우체국(46.1%), 수협(36.4%), 신협(22%), 새마을금고(19%), 일반은행(9.2%)
- 7대 광역시 점포비율: 일반은행(59%), 신협(40.2%), 새마을금고(36.9%), 우체국(25.0%)

□ 우체국금융의 주요 운용형태

- 3~7등급 사이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취급
 -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 3~7등급 사이의 중·저신용 등급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대출금리는 4~14%
- 최대 지원규모는 중·저신용자 대출잔액의 10% 수준인 40여조원 정도까지 취급하는 것이 필요

〈표 17〉 서민금융 전담 은행의 주요 운용형태와 내용

구분	주요업무 내용	비고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직접대출: 중,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 개인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원리를 적용, 비용 최소화하여 금리 대폭 인하 • 개인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하
대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등급의 중·저신용 개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형태의 시혜적 대출은 배제
금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 신용등급에 따라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2금융권 대비 5~10%p 금리하락 효과
운용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대출운용규모는 우체국 예금의 5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관리를 위해 총예금의 50% 이내로 제한 • 장기적으로 40조여원의 대출공급을 목표
감독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은행 수준의 감독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금융은 기본적으로 국책은행 형태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
신용 대출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상호금융기관보다 신용대출비중을 높게 운용

4. 채무조정제도의 혁신방안

□ 혁신 방향 : 연체 전(前) 사적채무조정제도 활성화

-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CB 기준 8~10등급의 저신용자들의 경우 20% 이상의 고금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금리 금융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결국에는 연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현행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과 바뀐드림론으로는 구제의 효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체전 사적채무조정제도 활성화 등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약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

(1) 고금리 잠재연체자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시행 및 금리 인하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미연체자들도 사적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연체화 최소화에 노력
 - 우리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신속채무조정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는 있음
- 문제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 일반대출: 15%, 카드대출: 10% 이내
 - 반면 미국의 사적채무조정기관인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에서는 적용 이자율을 2%까지 인하하여 사전적 채무조정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대폭 인하하여 잠재연체자들에 대한 사전적 채무조정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잠재연체자의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복위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2) 공적채무조정 신청전(前) 사적채무상담(또는 조정) 의무화

- 공적채무조정은 최후의 신용회복수단이 되어야만 연체채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현재 다중·과중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사적·공적 채무조정 모두 가능
- 저신용자의 경우 본인 부채의 심각성, 구제방안, 채무자의 권리 등에 대한 사전적 채무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공적채무조정 신청전(前) 사적채무 신용상담(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
-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사적채무조정제도(신용상담 포함)를 사전에 거쳐야만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회생 및 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전 사적채무조정 또는 사적신용상담의 의무화를 위해서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야 함

(3) 소액장기 연체채무의 원금 탕감 확대

-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2019.2.18.)
 -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 대상
 -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원금의 90%, 고령자는 80%, 장기 연체자는 70%까지 감면
 - 이들이 채무 조정 후 3년 동안 감면받은 빛의 최소 절반 이상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완전히 탕감
- 그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소액 장기연체자에 대한 원금탕감 확대 검토

- 제도의 시행 전 우려된 도덕적 해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2019년 3월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감면제도의 지원을 받는 총 1271명 중 실효처리(채무를 네 번 미납)가 된 사람은 1명뿐
- 따라서 도덕적 해이와 관계도 없고 사실상 채무상환이 없는 100만원 이하 5년 이상의 생계형 소액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탕감을 통해 신용회복과 조속한 재기를 지원할 필요
 - 국민행복기금 지원자 중 28.3만명 분석한 결과 채무 500만원 이하 43%, 연체 5년이상 52.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8〉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원금과 연체기간²⁾

채무원금<평균 1,054만원>			연체기간< 평균 6년 10개월>		
	인원(만명)	비중(%)		인원(만명)	비중(%)
~500만원	12.2	43.0	~1년	0.3	1.1
~1천만원	6.2	21.8	~3년	6.7	23.8
~2천만원	5.5	19.3	~5년	6.3	22.4
~3천만원	2.3	8.1	~10년	6.9	24.4
3천만원 ~	2.1	7.8	10년 ~	8.0	18.3
합계	28.3	100.0	합계	28.3	100.0

2) 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 2016.3.28

참고문헌

- 김영철·김홍균·남주하·박정수·이영훈·전현배·허정,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 학현사, 2019.2
- 남주하·김정렬·김영준·박정수, 「금융포용과 금융약자를 위한 미래 : 착한 금융과 따뜻한 금융의 실현」, 무역경영사, 2017.11
- 노형식·이순호,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금융 VIP 시리즈, 금융연구원, 2014-05
- 박창균·허석균, “서민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금융학회 발표논문, 2016.6
- 손상호,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6. 8.
- 오윤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 정책적 서민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3-08, 한국개발연구원, 2013. 8
-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2017.9.21.
- Klaus Maurer, “Bank Rakyat Indonesia: Twenty Years of Large-Scale Microfinance”, World bank, 2004
- Park, Cyn-Young and Rogelio V. Mercado, Jr, “Financial Inclusi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Asia,” 2015,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426.
- Patten, R.H., and J.K. Rosengard, and D. Johnston, Jr. “Microfinance Success amidst Macroeconomic Failure: The Experience of Bank Rakyat Indonesia during the East Asian Crisis.” World Development 29, no. 6 (June 2001): 1957-69.
- Rangarajan Committee (2008),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ial Inclusion, Government of India.
- Sarma, Mandira, and Jesim Pais, “Financial Inclusion and Development,” 2011,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23, pp.613-628.

Shepard(1984), "Personal Failures and 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7, No. 2, pp. 419-437.

Sullivan et al(1989), As We Forgive Our Debtors: Bankruptcy and Consumer Credit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여의도연구원은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여연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